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4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

2014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10 Agenda

20140108

vol.121

특집호



2014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10 Agenda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4년 01월 08일 vd.121호 특집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주발췌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 | |
|---|----|
| 01 발전 판의 전환: 중추도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 발전 | 4 |
| 02 농생명수도 : 동북아 농생명수도 조성의 원년..... | 7 |
| 03 전통문화도시에서 한문화(K-Culture) 수도로 | 10 |
| 04 힐링·웰빙을 넘어 ‘힐빙’, 전북의 전략..... | 13 |
| 05 새만금 내부개발 : 창조경제 요람으로 본격 개발..... | 16 |
| 06 중국진출, 강소성과의 상생전략부터 | 18 |
| 07 사회적 경제로 민생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 21 |
| 08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발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정착 및 이전효과 극대화 | 24 |
| 09 전북 맞춤형 복지..... | 27 |
| 10 정부 3.0과 빅데이터, 창조전북의 경쟁력 | 29 |

01 발전 판의 전환 중추도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 발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육성'은 기존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대체하는 지역 발전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말에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4개의 생활권으로 구성하고, 권역별로 추진 체계 구축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추도시권 육성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광역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 규모의 발전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체제하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은 권역별 추진체계 구축 및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중추도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발전을 위해 상징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권 연계사업의 발굴·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성화gangun@jthink.kr

생활권 연계교통망 확충 : 익산 KTX역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 구축

생활권 육성을 위해서는 도내 각 생활권의 내부 거점 및 권역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광역교통 결정점인 익산 KTX역을 중심으로 중추도시권내 시·군 중심지와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순환·연계교통망 확충은 전주 중추도시권 육성의 핵심 선결과제이다.

- 전주 중추도시권 연계 철도망(전주~완주~익산~군산) 구축 및 관광자원화(철도관광벨트)사업 추진
- 익산 KTX역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단계별 추진 : (1단계)광역버스 활성화, (2단계)광역 BRT, (3단계)신교통수단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 생활권간 광역 연계교통망 확충 :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부창대교(국도77호선) 건설, 임실~남원 국도 신설 및 확포장(국도30호선), 태권도원 진입도로 개량(국도30호선)
- 생활권내 연계 교통체계 정비 : 서남부권 통합ITS센터 건립, 전주~김제(지방도716호선), 익산~금마(지방도720호선), 고창~정읍(지방도708호선), 장수~번암 우회도로, 장계~계북(국도19호선)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 : 문화적 도시재생 및 선도지역 선정

생활권 중심도시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산업단지 등 H/W 정비와 일자리·교육·문화 등 S/W를 연계한 융·복합형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관정비와 한옥건축 활성화를 통한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이나,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창조공간 조성사업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노후 신단의 기반시설 개량이나 첨단산업으로의 개편사업 추진 등 생활권 경제기반 재생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한문화 수도' 육성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한식 기반 문화적 도시재생, 한옥마을 2단계사업 추진
- 전주·군산·익산 도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 노후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 익산 주얼리 창조산업단지, 전주·군산 지방산업 재생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U-Turn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 대응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14년초 공모 예정,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15년 이후 도시재생 예산 확보)

시군연계 창조산업 육성 : 농생명·식품산업 삼각벨트, '로컬푸드 체계 구축 등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군이 보유

하고 있는 자원과 기능을 상호 연계·융합하여 고유의 창조산업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라북도는 전통적 농도로써 풍부한 농업생산력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혁신도시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어 농생명·식품산업 허브 구축의 최적지이다.

- 혁신도시~식품산업클러스터~민간육종단지를 연계한 전주중추도시권 농생명·식품산업 삼각벨트 조성
- 농생명 식품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혁신도시 농생명대학(대학원 유치)산업연계클러스터(용지)
- 생활권내 도시·농촌을 연계하는 '로컬푸드 매장 확대 설치와 로컬푸드 학교급식체계 구축
-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연구개발 특구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중추도시권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 : 혁신도시·익산KTX역 Business Park 조성

전북지역에는 새만금,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활동에 필요한 고차서비스 기능이 취약하여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추도시권내 주요 거점지역에 전사·회의, 법률·회계 컨설팅 기능이 집적된 Business Park을 조성하여 수도권으로의 빨대효과를 차단하고 도내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와 익산KTX 역세권은 수도권과 1시간 거리의 광역 접근성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허브기능 강화로 Business Park 조성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 익산KTX 역세권에 고차 비즈니스 기능을 집적한 '중추도시권 Business Park 시범지역' 조성
- 혁신도시 농생명·식품 연구기능과 관련 산업을 연계하는 '농생명·식품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전북 여건에 부합하는 서비스산업 선정 및 중점 육성 : '컨설팅 디자인 패키징 분야'
- 지역 자원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 산업관광, 실버의료관광, 힐링산업, 전문디자인스쿨 등
- 서비스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조례 제정 '전담 행정조직' 설치

전주중추도시권의 한문화 수도 조성 : '한식문화수도', '철도 관광벨트' 조성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2단계 전략으로 한문화(K-Culture) 수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에 한정된 사업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각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융합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 한식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한식 기반의 문화적 도시재생과 시·군별 '한식특화거리' 조성
- 중추도시권내 주요 관광자원을 철도로 연계하는 '철도 관광벨트 프로젝트' 추진
- 한옥문화 확산과 한옥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한옥진흥원' 설립과 '한옥산업 클러스터' 조성
- 생활권 지자체간 관광협력체계 확충 '서남권 시티투어버스 운행 확대', '섬진강 3항 농촌관광 컨텐츠 개발', '동학혁명 역사문화가도 조성', 아름다운 순례길 조성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정비 : 광역 상수관망 최적화, 환경청파 프로젝트

지역생활권 생활인프라는 권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만경강·동진강 등 생활권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홍수피해 방지, 자전거 길 조성, 수변체험·레저공간 조성사업이나, 연안 생태환경 보전, 둘레길 정비 등을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간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하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동 설치·이용사업 등 주민 체감형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생활권내 하천·연안 등 생태환경의 정비 및 관광자원화 : 만경청파(萬頃蒼波)프로젝트, 동진강 갈대습지 관광자원화사업, 곰소만 갯벌 생태체험탐방 기반 구축
- 생활권내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상수도 공급 효율화 : 중추도시권·동부권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추진
-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도화·광역화 : 중추도시권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사업 생활권 연계 축산폐기물 공동 처리시설 조성

생활권 단위의 의료·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과 '낙후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개별 지자체 단위로 추진되는 의료·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은 생활권내 인접지역간의 관련 인프라 공급의 불균형은 물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저하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동부 지역 생활권 등 도내 농어촌 지역 시·군 대부분에서 산부인과를 비롯한 기초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내 인접 시군 간의 복지·의료 인프라의 격차 완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 공동이용: 거점 복지센터 설치(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복지서비스 광역화를 통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생활권내 시·군

간 복지서비스 통합화 및 일원화

- 고용·복지연계 특성화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공인력 양성 및 전문성 교육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생활권 중심도시 병원과 의료 취약지역 보건소·보건지소간의 의료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 농어촌 생활권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이미용 의료 마을순회 프로그램' 운영

교육여건 개선과 맞춤형 인재 양성 : 농생명·식품 전문대학원 설립

중추도시권의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교육기관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거점학교 활성화,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와 능력개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 혁신도시 농생명 연구기관 인력수요에 대응한 '농생명·식품 전문대학원 설립' 과 '대학별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사업' 공동 추진
- 중추도시권내 주요 대학과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관련 업체 혁신도시 등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을 연계한 '농생명·식품분야 산학·연 R&D 공동협력 프로그램' 운영
- 혁신도시 입주민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전주시·E원주군간 학군 통합(조정)
- 도내 각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간 협력·조정을 위한 '전북 광역 급식지원센터 설립

생활권 육성 추진체계 구축 : 생활권 협의체 구성과 발전계획 수립

4개 생활권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미래상의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내 시군의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권역별 특화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한편, 정부의 생활권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력 있는 연계·협력사업 발굴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전라북도 및 생활권별 거버넌스 구축 : '전라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 'OO생활권협의회'
- 생활권별 연계·협력사업 발굴(2014년 2월) : 생활권 연계 시범사업, 부처별 생활권 지원사업(2014년 상반기 부처 협의)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2014년 말) : 생활권 특화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의 전략계획
- 전라북도 지역발전계획 수립(2014년) : 도내 4개 생활권 발전계획을 반영한 도차원의 지역발전전략



02 농생명수도 동북아 농생명수도 조성의 원년

농업은 IC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NT(나노)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되면서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공급사슬 과정에서 농식품과 ICT 기술융합을 통해 생산정밀화·유통효율화·경영합리화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농업과 바이오, 그리고 ICT 융합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고비용 구조,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2014년은 농생명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 '농도' 전라북도가 '동북아 농생명수도'로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생명·ICT 융복합 창조농식품산업 육성', '동북아 농식품 R&D 허브 구축', '농식품 수출거점 조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을 발굴, 국가사업화 해야 한다.

이민수 minsoo.lee@gmail.com

바이오·ICT 융복합을 통한 창조농식품 산업 육성

새정부는 바이오 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농생명과학에 기반한 창조 농식품산업 육성정책으로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생명자원산업화 지원센터', 'ICT 융복합 모델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공학기술 개발의 핵심 프로젝트로 농촌진흥청이 주도하여 2011~2020년까지 총 1조 608억원이 투자되는 '차세대 바이오그린21' 1단계사업이 2014년 종료된다. 따라서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단계 프로젝트를 이전되는 농생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곤충자원화 센터, ICT융복합 실증농장 육성 등 정부의 창조농식품 핵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주도 '차세대바이오그린21' 2단계(2015~2017) 핵심프로젝트 발굴
- 지역 바이오산업정책에 발 맞추어 곤충·오디산업 2단계 육성 사업 추진(곤충자원화센터 설립)
- 정부의 창조농업 핵심프로젝트인 분야별(시설, 과수, 축산) ICT융합 실증농장 발굴·육성

동북아 농식품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농식품 R&D 허브 구축

농촌진흥청 이전 원년을 맞아 인력교류와 선도적인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역 대학, 그리고 전라북도 간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2014년에는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농생명연구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농촌진흥청, 지역대학, 지역연구기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선도적 프로젝트 발굴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의 지역과 학기술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고급인력양성 및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R&D와 연계한 농생명산업의 집적 기반인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농생명연구단지 조기활성화 실행계획 수립(농촌진흥청 및 산하 5대기관, 대학, 한국식품연구원 협력사업 발굴)
- 전북과학기술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정책 자문단 운영
- 농생명 기초연구 강화를 위하여 기초과학원 생명과학분야 연구단 운영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의 지역기술로드맵(RTRM)과 지역산업로드맵(RIRM) 작성 : 전라북도 농생명 연구기관 혁신역량과 미래 농업기술 전망

클러스터 조기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ICT 융복합 시설농자재클러스터, 골든시드클러스터, 미생물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전라북도에는 '미생물' → '종자' → '농자재(농기계)' → '식품'으로 이어지는 4대 농생명클러스터가 조성 중에 있다. 4대 농생명클러스터의 연계협력과 조기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2015년에 완공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원료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단지가 기획·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필요한 핵심 기능 추가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종자 R&D 연구거점(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센터)과 Golden Seed 프로젝트(2012~2021, 491억원)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정읍·순창·임실을 중심으로 발효미생물 융합산업 기지가 구축되고 있다. 발효미생물종가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미생물가치평가센터(280억)'를 계획대로 2014년 완공하고, 2015년부터 이를 활용하기 위한 R&D프로젝트를 사전에 기획하여야 한다. 넷째, 김제시를 중심으로 ICT융합 농기계클러스터가 현재 구축 중에 있다. 농기계산업과 연계하여 현재 확대되고 있는 시설원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기활성화 핵심사업 개발예 : 세계소스산업화센터, 원료농산물단지개발
-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대한 골든시드클러스터 계획 수립 종자산업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

- 화재단, 방사선육종센터, 전라북도 협력체계 구축)
- 전북광역농기계클러스를 ICT 융복합 시설농자재산업으로 확장(기본계획 수립, 2015년 국책사업화 추진)
- 발효미생물증가프로젝트 1단계 사업(미생물가치평가센터) 완료와 후속 2단계 실행계획 수립

수출농업 육성 : 동부권 시설농업, 대중국 수출 프로젝트

전라북도의 경우 시설농업 비중이 낮고, 시설농업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기술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같은 기술수준의 장점을 활용하여 여름 작기에 강점을 가지는 준고냉지 동부권을 신선 과채류를 생산하는 첨단 시설원에 단지로 육성해야 한다. 한중 FTA 체결 후, 유기 농산물 및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식품의 관세 인하로 “프리미엄 상품군”을 구성하여 중상류층의 한국 상품 구매 확대 기대된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에 특화된 시장개척 사업(대중국 거점바이어 구축, 거점바이어와 연계한 브랜드 개발, 대형 유통매장 바이어 초청 B2B 행사, 인터넷 쇼핑물 지원)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

- 전라북도 동부권 준고냉지 장점을 활용한 선진국형 시설원에 시범단지 조성
- 대중국 거점바이어와 연계한 공동 브랜드 및 상품 개발(14년 4개 상품)
- 대중국 수출에 특화된 시장개척 사업 추진(대형유통매장 초청 B2B, 인터넷쇼핑물 진출 지원)

귀농귀촌, 6차산업화, 로컬푸드를 통한 새농촌 활성화 정책 추진

중소농 소득 향상을 위한 전북 로컬푸드 육성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유통-소비체계 구축하고, 기획생산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수취율을 현재의 40%에서 60%까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생산-가공-판매-체험을 연계하여 농업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농촌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전라북도 자체시책인 농식품 6차산업화 정책을 확대하고,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정책을 통해 육성된 가공산업을 기반으로 마을단위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전라북도 로컬푸드 정책의 지속적 추진(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로컬푸드 생산단지 조성)
- 농식품 6차산업화 지구 확대(3개소) 및 6차산업화밸리 조성(기본계획 수립, 2015년 국책사업화 추진)
- 귀농일번지 프로젝트(수도권 귀농학교, 귀촌자 재능기부센터, 창업경진대회, 창업자금지원)
- 사회서비스사업 연계 농촌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



03 전통문화도시에서 한문화(K-Culture) 수도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문화기반 지역개발의 대표적 성공사례다. 다만, 전주한옥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집중돼 있으며, 전통문화 기반의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춘 2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한(韓)문화(의·식·주와 여기에서 파생된 흥, 의례, 환경, 지식, 열)의 종합적인 체험·관광·소비의 중심, 한문화 국제네트워크의 중심, 한문화 융복합 창조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한문화(K-Culture) 수도로 조성해야 한다.

장세길 zoru21@jthink.kr



한문화 체험·관광·소비의 One-Stop Multi-experience 공간 조성

한류영향에 의한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최근 5년 간 약 80% 증가)로 한문화를 체험·관광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소비·관광할 수 있는 One-Stop Multi-experience 기능이 부재하다. 한문화의 교육·연구, 전시, 체험, 쇼핑, 숙박 등이 종합적으로 가능한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전라북도를 한문화의 메카로 조성해야 한다.

- 생활문화·도시공간·디자인 등 한국스타일(K-style) 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
- 新인류의 대표주자인 한식의 종합 체험·교육·소비 거점 공간 조성
- 전라북도 1시군 1한식시장마을(전통시장 중심의 한식특화거리) 조성과 네트워크화

한문화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한문화대회 개최

정부가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을 확대하면서 한문화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가별 한문화 관련 기관·시설·단체 및 관계자 등이 개별화되어 있어 한문화의 세계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문화 국제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세계한문화대회 한문화 버전, 즉, 한문화 관련 각국 대표자 및 관계자, 단체가 한 곳에 모이는 세계한문화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라북도를 한문화 국제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문화 세계화의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문화 교육을 총괄할 거점 조성 또한 필요하다.

- 세계한문화대회 계획 수립, 2019년 국가사업화 추진
- 한문화 국제네트워크의 중심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예 영국 앤젤 오브 노스) 건립 추진
- 재외동포의 한문화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재외한민족역사문화관, 재외동포교류센터 등 국가사업화

한스타일 분야별 산업화 : 한옥산업클러스터, 한문화패션단지 등

한옥마을의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한옥체험의 대표지역에서 한옥산업의 중심으로 질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지(絲)를 개발·생산하는 지



역으로, 한지사를 이용한 한지청바지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한지섬유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주얼리 U턴기업과 연계한 한문화패션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리본향으로서 한국소리를 융복합한 콘텐츠 개발과 음향산업이 연계된 소리산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가칭)한옥진흥원 및 한옥산업클러스터 계획 수립, 국가사업화
- U턴기업 활용 주얼리패션, 한지섬유패션 등을 연계하는 (가칭)한문화패션단지 구상, 추진
- 한국소리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소리산업화를 위한 계획 수립, 국가사업화 추진, 유네스코 음악청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

제2의 김치냉장고 개발 위한 전통지식의 융복합 산업화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전통지식의 융복합화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는 생선냉장고, 프랑스에는 와인냉장고, 우리나라에는 김장독 기술을 융합한 김치냉장고가 있다. 관련 기관인 농업진흥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는 전북에서 제2의 김치냉장고가 개발되도록 전통지식 창조원, 전통지식 상용화TB, 전통지식 특수대학원, 전통지식 콘텐츠관, 전통지식 융복합단지 등이 집적화되고,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상품개발을 위한 R&D 등이 추진되는 (가칭) 전통지식의 융복합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국가사업화가 필요하다.

- 전통지식을 융복합하는 창조클러스터 계획 수립, 국가사업화
- 농업진흥청, 국립무형유산원, 전라북도의 협력체계 구축
- 관련 사업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새로운 자원의 발굴 : 종교·정신, 풍류, 술(전통주), 전통경관 등

인문·정신적 가치의 강조, 여가시장의 확대, 전통문화의 융복합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자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한국적 종교정신문화로서 '종교화합', 한국적 여가문화로서 '풍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술(전통주)', 한국적 힐링·힐링자원으로서 '전통경관' 등을 한식, 한옥, 한국소리처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산업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 종교·정신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사업화에,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세계성지순례대회 확대, 종교화합 상징공간화 위한 국가사업 발굴(예 : 종교화합문화단지), 추진
- 한국적 풍류 기반 여가시설(맛·멋·소리 종합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발굴, 추진
- 한국술(K-Wine)가도(假道) 조성, 마을별 전통주 복원프로젝트(예, 100개 마을 100개 전통주) 추진하고 네트워크 구축, 강원 영월의 박물관체험특구처럼 '전통주체험특구' 지정 추진



04 힐링·웰빙을 넘어 “힐빙”, 전북의 전략

힐빙(heal-being)은 치유를 의미하는 ‘heal’과 복지·안녕·행복을 뜻하는 ‘well-being’이 결합된 개념이다. ‘힐빙’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부작용과 병폐를 슬로라이프(Slow life)적 삶을 통해 ‘자연·환경’,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생활 속에 접목해 치유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고 건강한 생태공동체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전라북도를 글로벌 힐빙 창조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기반 한 전북형 ‘의료관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셋째, 전북형 슬로시티와 연계된 슬로라이프 체험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김형오 eventkim2000@jthink.kr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박근혜정부 지역·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전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남권 지역 내 제2의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자는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한방·자연치유의 숲'이라는 비전을 통해 한방자연치유에 대한 효과 입증,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한방 특화 인력 양성 공간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국민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 한다. 본 사업은 산림청과 진안군 주관으로 2013년 하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검증 과정에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의 2014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통과 대응
-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민 여론 확산 및 정치적 여건 조성
-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기 추진을 위한 2015년도 예산반영 대응활동

국민 식생활 교육의 산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 국가단위 식생활교육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식생활 교육의 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식생활 교육 및 식품안전 관련 국가기관과 치유 기반을 결합한 국가단위 식생활 교육의 연구 및 종합적 교육실행의 거점이다

18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사업지역,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되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 KDI 타당성 검증 과정에 있다. 우리 지역에 국가정책의 주요거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2014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통과 대응
-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정책적 정치적 여건 조성(국회포럼 등)
-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조기 추진을 위한 2015년도 예산반영 대응활동

승마 수요 확대를 위한 승마힐링센터 건립

정부는(농식품부·교육부·문체부) 증가하는 승마 수요에 대응하여 승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승마 활성화를 통해 레저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청소년 정서함양/재활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장수군은 지난 지역대선공약사업으로 '승마힐링센터' 건립이 선정되었기에 2015년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승마힐링센터는 인간과 말이 상호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사회관계 형성 및 신체발달을 위한, 재활, 치유, 여가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을 의미한다.

- 장수 승마힐링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2013년 완료
-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가 및 국회 세미나 개최(2014년 2월)
-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계획 반영
-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 사업, 2015년도 국가사업으로 추진

전라북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으로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의료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중앙부처별로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한 의료관광객 유치에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전북 의료관광객은 2,104명으로 전국 6위이며, 의료관광객 1인당 진료비는 156만원으로 전국 4위에 해당되므로 의료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연계관광 자원 발굴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객 발굴 및 유치 기반 강화, 의료관광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의료관광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2014년)
-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다국어 의료관광홈페이지 구축, 의료관광브랜드 개발, 의료관광 팸투어 실시, 한류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언론홍보, 홍보보로슈어 및 의료관광가이드북 제작 등
- 의료관광객 발굴 및 유치 기반 강화 해외병원교류확대 지원과 해외환자유치 연계 해외보험회사 및 국내기업 해외법인, 해외기업 등의 포상의료관광객 유치,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 의료관광 전문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 융합형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등
- 전라북도 의료관광센터 건립 사업 2015년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추진
- 한방휴(休) 메디컬스트리트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계획으로 추진 위한 타당성 연구(2014년도)
- 한방휴(休)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 2015년도 국가사업 추진

‘전북형 슬로시티’ 연계를 통한 힐링관광 상품 개발

전북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2014년 13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군별로 슬로시티와 연계한 슬로라이프 체험, 로컬 푸드, 마실길 등을 활용한 힐링관광 창조거점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을 힐링관광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슬로시티와 연계한 힐링관광 상품화 방안 마련, 선형 네트워크 구축, 체험공간 확대, 숙박시설 개선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전북형 슬로시티 연계 힐링관광 상품화 방안 연구 추진(2014년도)
- 전라북도 선(線)형적 관광루트 개발 연구 추진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2014년도)
- 도시민·청소년 휴(休)체험 공간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2014년도),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추진
- ‘농어촌관광 등급제’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농촌 숙박시설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05 새만금 내부개발 창조경제 요람으로 본격 개발

2013년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의 시행과 함께 새만금개발의 컨트롤타워가 될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부)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새만금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만금방조제 완공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새만금 내부개발 역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용지조성과 함께 투자유치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공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김재구 ppikoo@jthink.kr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보완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에 따른 개발지연, 공항소음에 따른 용지 재배치 등의 문제점과 함께 새특법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와 민간투자 활성화차원에서 수익구조 개선 등 실현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해야 한다.

- 새만금 조기가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1단계 사업 2017년 완료
- 항공소음 등을 고려한 과학연구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용지 재배치
-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를 위한 배후물류단지 우선 개발
- 새만금지역에 스마트 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적용

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공영개발방식 도입 및 선도지역 개발

새만금사업은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이며,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고 민간이 매립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익구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적합한 공기업이 선도지역 개발에 사업시행자로의 참여를 통해 새만금개발의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만금 세부사업 우선순위 조정
- 새만금 조기가발과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공영개발방식 도입 추진
- 새만금 관광단지를 새만금개발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공기업 참여 추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조성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중국 대외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정책이다. 따라서 대중국 전진기지인 새만금의 조기가발 촉진과 한중간 상호투자 확대·강화의 실천 방안으로써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잠재력이 풍부한 새만

금 부지를 활용하여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조성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 한중 FTA 추진을 계기로 한중간 신성장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유재산법 등 새만금특별법 관련 부수법안 개정을 통한 투자인센티브 확보
- 중국 식품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식품 및 농생명산업 거점과의 연계 추진

경제부흥 전략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매력 포인트 발굴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CI의 투자와 함께 세계적인 첨단소재기업인 일본의 도레이(TORAY)사와 벨기에의 솔베이(SOLVAY)그룹이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4년에는 새만금 투자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새만금사업에 있어 투자유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새만금만의 투자매력 확보와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새만금 남북축 간선도로와 함께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 조기 확보
-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용지별 부지 조성원가 인하 추진
- 새만금 투자의 매력 포인트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 채널 다양화 추진

지속가능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수질관리

지금까지 새만금의 가장 큰 이슈는 환경문제였으며, 대규모 농업 용지와 함께 수변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에 있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건강한 물환경조성 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 대응과 새만금 내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및 유역에 대한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세계적인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수립
- 2015년 예정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거버넌스 활동 지원
- 만경강과 동진강 등에 생태습지 복원을 통한 하천의 정화능력 및 생태건강성 향상 도모



06 중국진출, 강소성과의 상생전략부터

중국과의 교역은 하나의 성(省)만으로도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구매보다는 쌍방이 원하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상생전략이 중요하다. 2014년은 전라북도가 중국 강소성과 협력관계를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다.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강소성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중국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태원 twkang@jthink.kr

전라북도 · 강소성 교류 2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 개최

2007년에 강소성 남경에서 열린 '한국 전라북도 우수상품 · 문화대전 은 전라북도 기업 및 제품홍보, 문화관광, 전통예술, 경제교류, 해외자본유치,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전라북도 박람회로서, 서울 · 부산 · 제주 밖에 모르던 중국인에게 전라북도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컸다. 단순교류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서 교류 20주년 행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류행사를 계기로 양 지역 간 전략산업, 관광,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박람회 형식의 '전라북도-강소성 교류 20주년 기념 행사' 순회 개최
- 교류 20주년 기념, 전략산업 · 관광 · 문화교류 · 교역확대 상상전략 위한 국제포럼 · 국제회의 공동개최
-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강소성의 날' 선정 강소성 관련 행사 개최

교류 20주년 기념, 강소성 맞춤형 관광상품 발굴, 추진

한국 방문 중국관광객이 2005년 71만 명에서 2012년 283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높은 서울, 제주, 부산으로 몰리고 있다. 인지도가 낮고, 특히 공항이 없는 전라북도로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교류 20주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강소성민에게 전라북도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강소성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강소성민의 전라북도 방문을 이끌어내야 한다.

- 강소성 주민을 위한 미식투어 상품개발 : 전북 맛집 투어, 중국인이 선정한 전북의 맛집 발굴 등
-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 : 강소성 · 전북도 태권도인 겨루기 및 품새 대회 개최, 강소성과의 태권도 지도다 양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 태권도 체험단 유치 등
- 청소년 수행여행단 유치 : 한식, 태권도, 한류체험 중심의 특화 콘텐츠 체험여행단 유치
- 강소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교류 20주년 특별 인센티브 개발, 제공

군산 · 연운항(중국)의 교역확대 위한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뱃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 중심에 군산항의 활성화가 있다. 중국 강소성은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직행하는 중국대륙횡단철도(TCR : Trans China Railway)의 기점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연운항항의 활성화를 한국과의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군산항 · 연운항항의 뱃길 활성화'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년 동안 맺어온 강소성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 지역 및 항만 간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 추진해야 한다.

- 화물데이터를 공동 관리하는 전라북도~강소성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물동량 확보를 위한 지역맞춤형 국제 포워더 육성 및 지원
- '군산~연운항 공동 포트세일' 추진
- 기칭 '군산~연운항 활성화 협의체' 를 구성, 공동의 아젠다 발굴 · 추진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조성 및 강소성 투자기업 유치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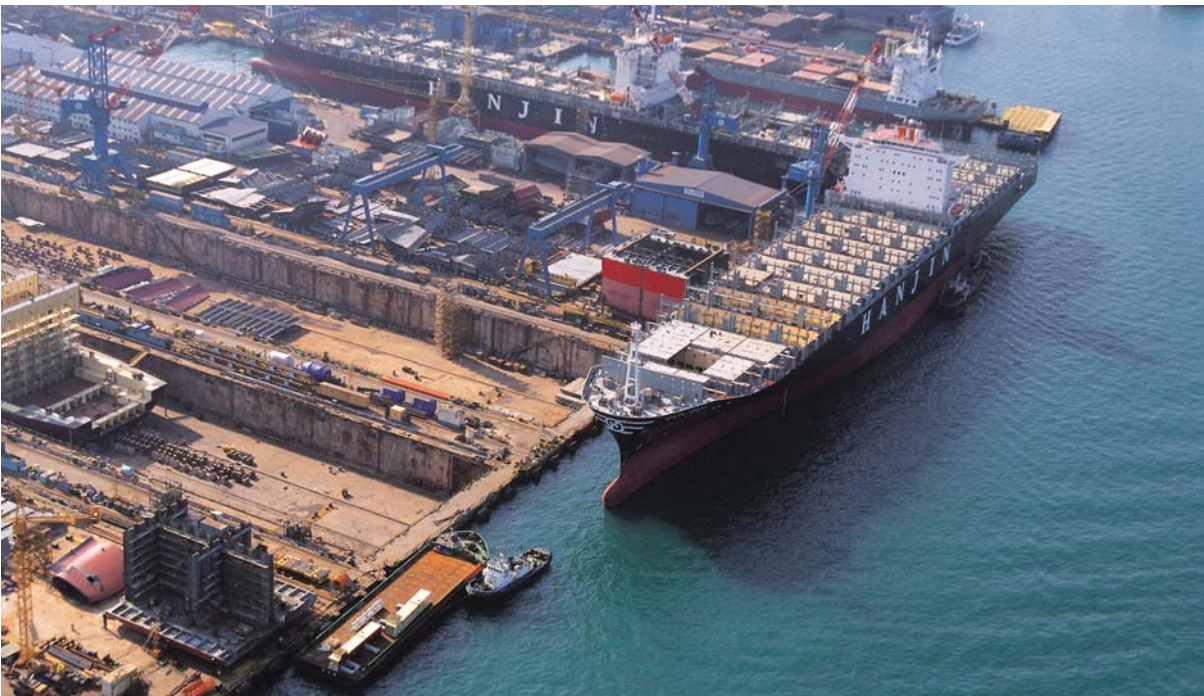
중국은 산업경제발전에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설립을 통한 수출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중국 식품기업의 해외투자가 있다. 특히 강소성은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거점으로, 중국 식품기업의 해외투자자와 관련해 중요한 지역이다. 새만금 부지에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강소성 내 다양한 기업(특히 식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강소성 간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교류 20주년 기념,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상생전략 마련
- 식품기업 중심의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추진을 위한 양국(지역) 간 국제포럼·심포지엄 개최
- 강소성 내 식품기업 파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및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홍보 추진

전북 친환경 농식품의 중국진출 위한 체계구축 및 특화전략 추진

전라북도 농식품의 중국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내 한식 수요급증과 안전한 먹거리 부각에 맞춰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수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정책시행으로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해야 하며, 중국진출의 선도 조직으로서 '전북농식품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강소성과의 전북농식품 중국진출을 위한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강소성 내 우수바이어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강소성 내 대형매장으로 진출하고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 고품질 농식품 생산 위한 친환경농산물 정책 추진
- 중국소비자가 선호하는 대중국 수출 전략 품목 발굴 및 집중 지원, 중국 구매시절단 초청
- 전북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인 '식품수출협의회' 설립, 중국 내 대형매장 입점 확대 등 추진





07 사회적 경제로 민생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지역이 잘사는 방법은 지역에 뿌리를 둔 경제활동 주체를 튼튼하게 육성하여 경제활동의 부가가치가 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데 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대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17.4%의 경제적 성과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내 경제구조가 그 원인이다.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물가인상을 막고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윤보다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하여 생산-소비하는 경제 시스템,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푸는 유력한 방안, 사회적경제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황영모 hymlsm@jthink.kr



이용하기 편하고 똑똑해지는 전통시장 · 골목상권의 스마트워크

대형마트가 지역소비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골목상권은 민생경제와 지역순환경제의 대표 상징이다. 외부 유통자본에 의해 위축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민생 살리기의 시작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배송 및 문화 콘텐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경영에 필요한 특례지원 등의 대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주민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이용하기 편하고 똑똑해지는 전통시장 · 골목상권 '스마트워크 시스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특례보증(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의 확대 추진
- 골목상권의 경영능력을 키워 변화를 주도하는 '골목시장 CEO 전문 아카데미' 개설 운영
-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이용 증대와 전통시장 배송·택배 서비스의 전면적 지원
- 맛과 멋이 살아있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 및 책임조달의 확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영리기업에 견준 비효율적 사업구조에 있지 않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지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가 더욱 크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을 사회적 책임조달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상품·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우선 구매하는 정책 환경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범도민 차원의 사회적경제 일반소비 확대를 위한 '착한소비'를 적극 전개해 가야 한다.

- 사회적경제 조직 상품의 공공구매와 우선구매 확대를 촉진하는 자치단체별 관련 조례의 제정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및 우선구매 참여조직의 확대와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일반소비 확대를 위한 1사 1사회적기업 연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착한소비 캠페인의 대대적 전개
- 사회적경제 조직 상품의 실질적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추진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정책 마련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대다수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자리 유지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을 연계하는 이른바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개별 조직을 연결하여 구심체를 만든다면 지속적인 사업과 활동이 가능하다.

-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 판매거점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상품 거래관계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 상품을 홍보·판매·교육·인규베이팅 하는 사회적경제 복합센터(전용 쇼핑몰 포함)의 설치
 - ※ 사회적경제 조직 거래관계 조직화 사례 : 완주군 로컬푸드스테이션과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촌마을 등의 상품·서비스 판매의 핵심거점으로 안정적 판로처로서 기능하고 있음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달체계의 구축

정부 부처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칸막이 문제를 도차원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연계하는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정책조정기구 등의 컨트롤타워(위원회)를 민관협력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해 도와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한 통합적 정책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지역공동체 사업의 현실적 연계체계 강구(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 공동체마을만들기 등)
- '(가칭)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위원회(거버넌스형 정책조정기구)'의 설치·운영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
- 유형별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마을만들기협력센터, 순환경제지원센터 등)역할을 강화하고,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지원·유도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 진흥 활동 및 프로그램 전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직업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 안전성이 낮은 상태에서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 활동인구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 학교교육은 물론 생활 속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개별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돌봄, 환경, 친환경자원재생)와 복지·일자리·농촌서비스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설립 지원
- 도내 (국립대학 내 사회적경제 대학원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추진
- 학교교육 관련 기관도 교육청 등들이 협동으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특성화 교육과정'의 운영



08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발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정착 및 이전효과 극대화

2014년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정착과 더불어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성공적 정착, 혁신도시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 혁신도시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 및 정착,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이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대두될 것이다.

김이수 vtopc13@think.kr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성공적 정착지원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입주민들의 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입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교통, 먹거리, 쇼핑, 문화, 여가, 관광, 교육, 복지 등)을 구축하고 이전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 지원이 필요하다.

- KTX 연계 교통망 구축 : KTX 전라선 증편 익산에서 혁신도시로 셔틀버스 운행 등
- 교통,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정주환경의 조기조성
- 입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간 조정 및 협의 강화
- 입주민들의 도내 공공기관(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의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활용 촉진 : 혁신도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문화탐방' 적극적 활용
- 이전기관 및 입주민들과 도민들의 교류 및 융화 프로그램 운영 (예 : 이전기관과의 공동행사 개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농생명 분야를 비롯한 식품산업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 공무원교육, 지적 및 공간분야, 전기안전 분야 등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공공기관들이다. 이러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됨으로써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매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이전기관들과 연계하여 이전기관들의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산학연 협력,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전기관과 도내 대학 기업간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이전기관과 연계한 R&D 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 이전기관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민간기업 및 연구소 유치 (예 : 농식품 기업 및 연구소)
- 이전기관과 상호협력이 높은 공공기관·협회 등의 분소 설치 및 동반이전 추진
- 이전기관, 입주민 관련 기업들의 유입 및 관련 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혁신도시의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전라북도가 농생명수도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혁신도시 농생명 이전기관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 방사선육종연구센터(정읍) 등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과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농생명 분야의 관련 기관들간 공동 R&D사업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농생명 기업유치, 클러스터 구축사업들의 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할 농생명 산학연 기관간 협의체 구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 첨단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지원서비스 구축, 연구지원기반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산업시설, 연구(R&D), 기업지원시설, 테마파크, 이주단지 등 기타 시설

-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대학, 도내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사업 발굴
- 농생명 분야 전문 및 지원인력 양성
-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들,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연계된 민간기업 유치
- 농생명 분야 전라북도, 이천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간 혁신도시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 농생명 분야의 연구-생산-가공-유통의 선순환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간 협의 및 조정
-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의 거점기관으로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구 이파트형공장) 설립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정착 및 지역금융산업 발전방향 모색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금융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금융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금융 및 자산운용 기업 및 관련 기업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분원유치 등이 필요하다.

- 기금운용본부의 업무지원을 위한 교통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 금융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도내 금융전문인력양성, IT 백업센터 분야아 아웃소싱 관련 전문인력, 콜센터(상담 컨설턴트) 전문운영인력 양성 등
-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금융 및 자산운용 관련 기업유치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IT 업체 등
- 금융관련 백업센터 및 전산센터, 기금운용본부 및 관련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치
- KAIST 등 국내 유수의 금융전문대학원 분원유치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한 도내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이전기관들의 지속적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MOU 체결, 이전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대학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전라북도, 대학,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협력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전기관과 전라북도, 도내 대학 간 인력양성 MOU 체결
- 이전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이전기관과 연계한 전라북도와 도내 대학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09 전북 맞춤형 복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각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맞춰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간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도 새정부의 복지철학에 맞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높은 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상황에 맞춰 한단계 정교화된 '전북형 맞춤형 복지'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북형 맞춤형 복지는 전북이 안고 있는 '높은 복지수요'와 '도농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과 '소득계층간 복지수혜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복지 패러다임이다.

이중섭 welfare73@jthink.kr

지역맞춤형 복지 : 유사 복지시설의 통합과 복지시설간 기능 재조정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시설의 유형 중 이용시설은 도시에 집중된 반면, 생활시설은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맞춤형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시설의 설치보다는 지역의 인구수요에 맞춰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인구구조와 복지자원은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을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간적 구조에 맞게 재설정하여 특정지역의 복지과잉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시이용시설 지역인구 특성에 맞게 복지서비스 특성화 : 아동복지관특성화, 다문화복지관특성화
- 농촌지역 마을단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사회복지시설 기능개편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연계 추진

재정맞춤형 복지 : 복지사업 중복최소화, 성과별 차등배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전라북도는 전체 예산의 30%이상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고, 이 같은 복지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높은 복지투자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은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최적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정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기투자 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복지재원내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긴박한 복지수요에 투자하여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중복수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간접경비로 지출되는 시설지원예산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부처별 복지사업 연계 협력을 통한 유사 복지사업 조정
- 복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차등배분사업 확대
- 시설중심의 간접지원방식 지양, 대상자 중심의 직접지원 확대

계층맞춤형 복지 : 중산층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라북도 복지재정의 50%이상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주로

저소득 빈곤가구에 투입되고 있어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복지수혜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중산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도민의 복지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산층의 복지욕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체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바우처로 제공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기관이 산재해 있는 도시지역은 중산층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기관이 부족해 지역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제공기관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시-농촌 특화 지역사회서비스 개발과 적합 일자리 발굴
- 농촌지역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지역기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발굴
-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요 파악 및 직업훈련 연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차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전국을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계획한다면, 전라북도는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범위로 설정된 복지정책을 도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에 맞춰 한단계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북형 맞춤형 복지는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발달단계에 따라 복지정책을 차별화하고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영유아는 보육을 중심으로 공보육을 강화하되 시설의 확충보다는 보육서비스의 품질개선에 초점을 두고 아동청소년은 안전과 돌봄을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장년층은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로 흡수하여 높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은 장애정도와 건강수준에 따라 돌봄과 일자리를 병행하여 보호와 자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애주기별 복지수요 파악과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 2014년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계
- 어린이집 품질개선 및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통합
- 경로당 활용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운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청장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연계
- 지방이양 및 도 자체사업 중심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0 정부 3.0과 빅데이터, 창조전북의 경쟁력

신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정부 3.0”을 국정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일상이 된 모바일 및 SNS 문화는 실시간 연결과 소통으로 데이터 폭증을 야기하였으며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융합된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정부 3.0 정착과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빅데이터 산업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21세기의 원유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013년 「전라북도 정부 3.0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총 10개 부문에서 51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내년은 정부 3.0을 정착시키고 빅데이터에 대한 발굴 및 적극 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임승현 shlim@jthink.kr

전라북도 정부 3.0 확산 및 도민참여 촉진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 그리고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 3.0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시행해야한다. 특히, 행정업무를 과학적 기반에서 수행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민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3.0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3.0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함으로써 전라북도 정부 3.0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정부 3.0 전문교육 과정 상시 운영(공무원교육원, 정보화교육장)
- 고위직 공무원 대상 정부 3.0 전문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전라북도 정부 3.0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 관리체계 구축
-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부 3.0 홍보 및 아이디어 공모 등 도민참여 행사 발굴
(예: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체계 정착

정부 3.0의 최우선 시책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전라북도 정보생태계 3.0」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북도 및 시군의 공공데이터를 도민 누구나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형식으로 제공해야한다. 또한, 개방과 공유가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발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선 순환적 정보생태계가 형성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 표준플랫폼 및 Open API 구축
- 부시간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 공유 클라우드서버 구축
- 전라북도 공공정보 민간 활용 광역 커뮤니티 센터 운영

빅데이터 분석·활용 광역인프라 구축

공공 및 민간에 부문에서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저장·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저장된 빅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전라북도 빅데이터 광역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북도 및 시군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

정책의 환류체계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빅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도정운영을 실현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시키는 핵심인프라가 될 것이다. 또한, 신산업창출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농촌 등 지역특화분야의 빅데이터 발굴조사, 빅데이터 컨설팅체계 구축,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육성 등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할 것이다.

- 전북도 및 시군 공동운영 「전라북도 빅데이터 광역지원센터」 설립 추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빅데이터 발굴 및 수요조사 추진
- 공공정보와 융합된 빅데이터 컨설팅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민체감형 공공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 주택공급 유형별 수요자의 공간적 분포와 소셜데이터를 융합을 통한 분양정책결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확대 추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빅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맞춤형 공공서비스 활성화 등 빅데이터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시범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과 대중국 투자유치,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 분야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요자 또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는 전북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한다.

-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서비스체계 구축
-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 대중국투자유치를 위한 중국관련 빅데이터 구축
- 새만금사업 관련한 소셜미디어 분석



전북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4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

2014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10 Agenda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직팔죽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